

李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내용

“혁신도시·기업도시 재정지원 늘릴 것”

공교육 정상화 직접 나서 챙기겠다

서민들 경기회복 느끼도록 만들 것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2010년 국정운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연설의 요지는 올해를 대한민국의 선진일류국가 진입의 원년으로 삼아 ‘더 큰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을 각 분야별로 조명해본다.

◇경제 분야=이 대통령은 신년 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회복 없이는 교육도, 정치도, 외교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창출에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는 동시에 하반기에는 서민들이 경제회복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희망과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매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직접 점검하겠다는 구상도 내놔.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고 국민적 선택을 받은 만큼 경제만큼은 확실히 살려놓겠다는 다짐과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교육 개혁=이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현 정부 들어 사교육비 절감, 입시제도 개선, 취업 후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내놨으나 여전히 국민적 불신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이날 “새해에는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국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교육개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국정연설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에 갈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발전=이 대통령은 또 ‘세종시 문제’가 연초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의

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강력한 추진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재정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남북 관계=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남북간 상시적 대화기구설치를 제안한 뒤 북한에 대화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는 6·25 6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용사들의 유해발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 주목을 받았다.

◇정치 선진화=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 선거제도 개혁 등도 올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로 상정하면서 정치선진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방위 외교를 통해 국격과 국가브랜드를 한단계 제고함으로써 ‘더 큰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어르신들 시원하시죠” 광주시 남구청 간부들과 동아여고생 40여명이 4일 남구 서동 효사랑복지문화센터에서 신년을 맞아 어르신 발마사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진심 담긴 호소” “비전 없는 말잔치”

여야李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엇갈린 평가

여야는 4일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전진케 하려는 각오와 실천의지가 담겼다”며 추켜세웠지만, 야당은 “민생과 대북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정책비전이 결여된 말 잔치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와 희망의 역사를 열어가자는 진심과 따뜻함이 묻어난 호소”라며 “호랑이와 같은 기상과 패기로 2010년을 힘차게 달리자는 비전 제시이고 대한민국을 앞으로 전진케 하겠다는 각오와 실천의지를 담은 신년의 화두였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이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고에 사달리는 서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계획은 전

혀 발견할 수 없고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절감 등 민생대책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그동안 해오던 정책을 나열한 것 말고는 새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혹평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정책 관련 내용은 실망”이라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 당사자 지위를 확보하고,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 국정 기조를 반박하겠다는 것으로, 일방독주와 불통의 기운을 느낀다”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성장률과 4대강 사업 등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착해 국민의 삶과 복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는 빠져있다”고 각각 비판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예산 70% 상반기 배정 경기회복 ‘가속’

재정 조기 집행 한시제도 연장·일자리 사업 공모기간 단축

예산집행 실명제 이달내 도입...공공부문 에너지 10% 절감

정부는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일자리 사업 공모기간을 단축하고 지난해 조기 집행 목적에서 도입한 한시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 재정 60%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출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전체 세출 예산의 70%인 178조3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 추세를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자리 지원, 민생안정, 사회간접자본(SOC)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비는 71.7%인 164조원을 상반기에 배정,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각 중앙관서의 조기 재정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 날짜로 예산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예산집행지침은 예산 배정 후 1월 말까지 통보토록 돼 있으나 배정과 동시에 통보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 지침에서 시설공사의 발주,계약,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긴급입찰제도, 법정경비 및 안전관련 경비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권 부여 위임,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선교부 등 재정 조기 집행을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일자리 공모, 원가 검토 등 재정집행에 결

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는 지침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사업 공모기간은 평균 45일에서 30일, 총사업비 사전검토는 30일에서 10일, 자치단체 공사 원가검토는 10일에서 7일, 예산 이·전용 등 변경협의는 20일에서 10일로 각각 단축된다.

또 최종수요자에 대한 실집행률을 관리,공개기로 했으며, 부처나 지자체가 단순집행률 제고 목적에서 공공요금, 급여성 사회복지 보조금 등을 선집행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이상 절

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사 신축 때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에 맞춰 설계·시공토록 규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설비투자 및 절수형 수도설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여름철 냉방 27℃, 겨울철 난방 17℃ 이하를 실내온도로 정했다.

또 정부 자산 취득 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이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조명의 설치 및 교체 시에도 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업무용 승용차량도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정부는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집행 담당자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예산집행 실명제를 1월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2회계연도를 초과해 이월할 수 없도록 하고 총액으로 계상된 민간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는 등 보조사업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연말 밀어내기식 예산집행을 막기 위해 기본경비의 연도말 이월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하고 건축부지 매입 시 국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재정부와 사전협의토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www.nanomtech.co.kr
대표번호 1577-8515

황금의 5분을 아십니까?

하루15분만 투자하면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5분만 투자로 건강을 지키는 HeartPlus ACD-10000A
소중한 시간을 아끼세요!

광주최혁신기술관과 공동연구개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로써
전기충격기 사용 시 안전성을 확보

